

현 중3 대입, 수시·정시 통합 모집 사실상 백지화

교육부 “국가교육회 결정 존중” 8월까지 대입개편방안 마련할 것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두 곳에서 각각 결정된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부·학종·수능 전형 적정 비율’, ‘수능 절대평가 방안’,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교육부는 ‘수능100%전형시 수능원점수제 도입’, ‘학종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 간담회와 설문·서면조사 등을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 결정 관련 교육부의 후속조치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공론화 범위와 권고사항 등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고 강조하고 “공론화 범위 미포함, 교육부 결정 통보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교육평가전문가, 대학교 및 평가원 추천 연구자 등과 함께 협력해 전문가·직접적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해관계자 중심의 간담회, 설문·서면조사, 대입정책포럼 등 의견수렴과 전문적·기술적 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달 31일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로 ▲학생부·학생부종합·수능전형간 비율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3가지로 확정하고 공론화 미포함 사항과 권고 내용을 교육부에 반송한다. 다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한 공론화 범위와 권고안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지난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의 이송안에 포함했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선발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는 학생 부담 증가와 대입전형 복잡성 증가, 전형기간 축소로 인한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부실 등이 우려된다면서 수시·정시 통합 여부를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고, 아울러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모집 분리 모집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수능 100% 전형시 원점수제 공여부는 교육부가 전문가와 직접적 이해당사자와 함께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회의는 이에 대해 현실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들어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공론화 범위에서는 제외했다. 다만 “향후 교육부가 필요한 경우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원점수제 검토 여부에 대해 “이번 추진 방안은 지난 31일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이라면서 “추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즉답을 하지 않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수능 평가 방법에 대해 ‘전과목 절대평가’(1안), ‘제2외국어·한문 절대평가 추가 도입’(2안) 등 두 가지를 공론화 범위에 포함시켰다.

교육부는 이밖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선발결과 공개) ▲수능 과목에 통합사회·통합과학 포함 여부 ▲대학별 고사 ▲수능-EBS 연계율 등 국가교육회의가 기술적·전문적 검토를 거쳐 확정해 달라고 권고한 사항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와 부대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국가교육회의의 시민 참여형 속의 공론화와 학생부 기재 개선 정책 숙려 내용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해 8월말까지 종합적인 대입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경민대 ‘3D프린팅’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경민대학교(총장 이연신)는 지난달 31일 사단법인 한국3D프린팅협회(회장 최진용)와 3D프린팅 분야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비롯해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수 연구지원 및 특허출원, 산업현장 실습 교육 및 취·창업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병조 경민대 부총장은 “경민대가 3D프린팅과 융복합 부문에서 관련기술과 전문인력을 중점 육성하고 저변확대에 앞장서는 경기 북부권역 허브센터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병무 한국3D프린팅협회 사무총장은 “그동안 3D프린팅 산업분야 전문인력양성과 우수기업 발굴, 투자유치 등



지난달 31일 경민대와 사단법인 한국3D프린팅협회가 ‘3D프린팅 분야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민대학교

의 사업 추진을 통해 축적해온 자산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3D프린팅 공동 프로젝트 개발과 인재육성을 비롯해 스마트팩토리 등 4차산업 제조혁신 분야에서 경민대와 함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

세종대 후기 대학원 신입생 모집

세종대학교·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규)는 세종대 일반대학원이 2018학년도 후기 대학원 신(원)입생을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원서접수는 4일~11일 오후 5시까지다.

신(원)입생 선발 주요 학과로는 나노신소재공학과, 바이오융합공학과, 건설환

경공학과, 인공지능언어공학과, 국방시스템공학과, 중국통상학과 등으로 현재 석사 과정 46개 학과, 박사(석·박사통합)과정 42개 학과에서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호텔관광경영학과, 조리외식경영학과,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등의 경우 국내 대학 중 첫 설립에 관련 분야 학문적 체계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종대 일반대학원 모집학과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graduate.sejong.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용수 기자

성신여대 신입총장 양보경 교수 선임

학교법인 성신학원(이사장 황상익)은 지난 3일 이사회를 갖고 총장후보 선거에서 1위로 선출된 양보경 지리학과 교수(63·사진)를 제11대 총장으로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신입 총장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4년이다.

황상의 성신학원 이사장은 “성신 역사 최초로 모든 구성원이 참여한 선거에 담



긴 뜻을 온전히 수용해 민주 성신의 새로운 조타수로 양보경 총장을 선임했다”며 “재학생투표율 54.1%의 예견치 못한 기록은 성신여대를 넘어 한국 대학사에 길이 빛날 성취이며 모든 구성원들이 성신의 민주화와 정의로운 발전을 염원한 덕분”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포괄임금제 규제, ‘인건비·근무강도’ 영향”

기업 88.9% “영향 받을 것” 답변 시기상조 ‘38.9%’ 규제 필요 ‘35%’

정부가 오는 7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을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기업 10곳 중 9곳이 포괄임금제 규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조사됐다.

사람인은 기업 인사담당자 7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9%가 ‘포괄임금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영향이 미치는 부분(복수응답)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의견이 65.1%로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근로자의 근무강도 증가’(25.2%), ‘근로시간 축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비용 증가’(20.5%), ‘신규 채용 감소’(20%), ‘생산성 저하’(18.3%), ‘구조조정 필요성 증대’(9.6%) 등이 있었다.

특히 포괄임금제 규제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직종으로는 ‘제조·생산’(34.5%)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서비스’(10.9%), ‘영

기업 89% 포괄임금제 규제 영향 있어!



업·영업관리’(10.6%), ‘연구개발(R&D)’(9.3%), ‘IT·정보통신’(7.5%), ‘인사·총무’(6.1%) 등이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은 절반 이상인 56.7%였다. 상시근로자 규모별로 ‘50인 이상’(73.4%), ‘100인 이상’(67.4%), ‘30인 이상’(64.8%), ‘300명 이상’(62.7%), ‘10인 이상’(54.2%), ‘5인 이상’(40.5%), ‘5인 미만’(33%)의 순으로, 10인 미만 기업의 포괄임금제 시행 비율이 낮았다.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기업들은 그 이유(복수응답)로 ‘사무직의 경우 근로시

간, 휴식시간 측정이 어려워서’(40.5%), ‘업·직종 특성상 시간외 업무가 자주 있어서’(40.2%)를 많이 꼽아 근로시간 관리의 어려움이 포괄임금제 도입의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났다. 이외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32.2%), ‘임금 계산이 편리해서’(27.6%) 등이 있었다.

포괄임금제 규제에 대비한다는 기업은 75.1%로 나타났고, 그 방법(복수응답)으로는 ‘초과근로시간 제한’(44.1%)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초과, 연장근로 수당 산정 기준 마련’(33.1%), ‘탄력, 유연근로제도 도입’(30.8%), ‘야근 결재제도 도입’(19.7%), ‘기존 연봉 감축(연봉에 포함된 야근, 특근 등 수당 제외)’(18.7%), ‘계약직 근로자 채용 확대’(10.7%) 등이었다.

포괄임금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규제가 필요하나 시기상조다’(38.9%)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포괄임금제 규제는 필요하다’(35.6%), ‘국내 경영 환경에 안맞아 불필요하다’(25.5%) 순으로 조사됐다.

/한용수 기자

연세대 이한열 31주기 추모제

연세대(총장 김용학)는 오는 8일 오후 3시 연세대 한열동산에서 이한열 31주기 추모제를 연세대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회장 김용학 연세대 총장)와 이한열기념사업회 공동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연세대는 올해 김용학 총장을 회장으로 하는 이한열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발족했으며, 1일부터 9일까지를 공식 추모기간으로 선포했다.

공식 추모기간 동안 추모제를 비롯한 추모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추모제에 앞서 7일 오후 4시 연세대 대우관 각당헌에서 영화 ‘1987’ 장준환 감독, 김경찬 작가, 이우정 대표, 이경란 이한열기념관 관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학생들이 참여해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가 열린다.

추모제 다음날인 9일 오후 1시 30분에는 이한열기념관에서 출발, 연세대 교정 안에서 민주화운동의 자취가 남은 장소를 따라 걷는 ‘이한열 민주화의 길 걷기’

행사가 진행된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리는 ‘이한열문화제-1987, 세상을 바꾸다’ 행사에서는 연세대 80년대 학번들의 동문 합창단, 고려대 합창단, 재학생 동아리가 참여해 노래와 춤 등으로 이한열과 만나는 시간이 이어지고, 오후 6시에는 이한열 동산에서 이한열 추모의 밤 행사가 개최된다.

1986년 연세대 경영학과에 입학한 이한열 열사는 2학년이던 1987년 6월 9일 연세대에서 열린 ‘6.10대회’ 출정을 위한 연세인 결의대회’ 시위 참여 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뒤 27일간 투병하다 7월5일 숨을 거뒀다. 당시 이한열 열사가 최루탄에 맞아 피 흘리는 사진은 전두환 정권에 맞서 6월 항쟁을 이끌어낸 기폭제가 됐고, 정부로부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겠다는 항복을 받아내는 계기가 됐다.

/한용수 기자